

• 테마기획 I

# 새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

황홍규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 I.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식민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교육 때문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특히 대학은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 해방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설립되어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해 왔으며, 이제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일변도의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한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학습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가 일정한 틀 속에서 대학의 설립·운영을 획일적, 규제적으로 관리해 온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학이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에 있어 국가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새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I. 대입 자율화

먼저 논란이 많았던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중 수능능력시험 성적 제공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역별, 과목별로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2009학년도부터는 등급외에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도 함께 제공하기로 2008년 3월 10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입자율화를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시관리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양하는 것이며, 2단계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마지막 3단계는 완전자율화 단계로서 2012년 이후에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 창의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부여할 계획이다.

1단계 대입자율화 조치를 위해 정부는 6월 초에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10학년도 입시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회원대학간 협의를 거쳐 각 대학들이 준수해야 할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수시·정시모집 등 전형일정도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대교협 등에서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발표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입시관리기능을 대교협 등이 차질없이 수

행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행·재정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2007년도부터 20억원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올해는 158억원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하여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지원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채용과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시험점수 위주 학생선발 관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대입완전자율화의 실질적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이 암기위주의 지식보다는 소질, 적성, 특기,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책임감, 봉사성, 리더십, 역경극복 등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유형과 기준 등을 새롭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대입전형 선진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지원대상학교도 현재 10개교에서 30여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 입시자율화를 위해 2012학년도 수능부터 응시과목이 축소될 수 있도록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8, 9월중에는 그 시안을 마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3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 조치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대입자율화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대학이 국민의 신뢰에 반드시 화답하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정부도 대교협 및 각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급격한 제도의 변화 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며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합치되는 방향에서 입학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 해 나갈 것이다.

### Ⅲ. 대학 운영의 자율화

교육과학기술부는 3단계 대입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로 인

해 갖게 된 여유를 대학 운영 자율화의 든든한 초석을 깔아주는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개최된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1단계 대학 운영자율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대학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단계 과제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의 단과대학과 처·실·과 등 하부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교수의 임기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국립대학에 대한 인사 규제를 완화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모집단위를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하고, 교원의 소속 역시 원칙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보건계열이나 사범계열 등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셋째,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내에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실질적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재는 석·박사 학위과정만 통합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석사학위 과정의 통합 운영도 허용하며, 학칙보고제를 폐지하고, 학년도 시작일과 만료일을 대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1단계 과제를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설치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자율화 과제는 현재 각 대학들과 대교협 등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개별적 검토를 완료하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과제에는 대학에 부담만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될 것이다. 특히 전년도 입학 총정원 범위 안에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자체적으로 학과 등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원외에 교사, 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 확보율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등록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편제정원으로 하도록 하고, 정원의 입학생수, 계약학과 학생수는 제외하도록 할 것이다.

3단계 과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과제도 내용에 따라 금년 안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같은 대학운영 자율화를 통해 정부는 불합리하게 부과된 대학의 부담들을 획기적으로 덜어 줌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방대학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대학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은 대교협이나 각 대학간 협의 등을 통해 자율규제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 Ⅳ. 국립대 법인화 및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 수나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 교수 등 대학구성원들이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오해로 불필요한 갈등을 일

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립대학을 일시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준비된 대학이 원할 경우 법인화를 지원하거나, 법인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 보다는 정부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교비회계를 설치하여 학생 등록금, 입학전형료, 졸업증서 등의 발급 수수 등을 국고로 납부하지 않고 이를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국립대학이 직접 자기예산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성회비는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고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현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겠지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면 교비회계외에 현재 국립대학이 운용하고 있는 산학협력단회계, 병원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등에 대해 합산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등 학교의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며, 발전기금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성회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채용된 직원들도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교직원 인건비는 지금과 같이 정부 일반회계로 지급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역시 총액으로 교비회계에 출연하는 등 정부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등록금은 교직원과 학외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물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립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합하여

스스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되고, 전용과 이월이 폭 넓게 인정되며, 적극적으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등록금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V.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한편, 정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올해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등록금 전액 수준으로 하며, 차상위 계층의 학생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이자 2%를 보전하여 현재 7.56%수준인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고, 그 밖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일반대출을 보장하는 등 ‘소득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반대학생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과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 사업을 통합하여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관련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VI. 대학 연구비에 대한 간접경비 인정 비율 확대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있어서도 현재 15% 수준인 간접경비 인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연구인력 확

보가 대학의 재정 확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2008년 현재 3,704억원 규모인 개인과 소규모 연구비를 2012년까지 1조 5천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기초원천투자 연구도 2008년 2.8조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8.1조원까지 확대하여 개인연구자, 신진연구자 등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 연구비 지원 및 평가절차 등을 효율화·간소화하여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규 재정지원 사업부터는 대학의 대응자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 VII. 대학 재정지원 사업 체제 개편

기존 교육부가 추진해 온 일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교수·연구자, 학생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원과 학부 수준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에 따라 목적형 기관지원사업 중 대학원 수준 사업은 교수·연구자에 대한 연구과제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고 대학에는 소속 교수에 대한 연구과제 수혜에 따라 간접비가 지원되며, 학부 수준 사업은 대학정보공시제와 연계한 포물러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원된 사업비는 교육인프라와 장학금에 사용토록 하여 학생선택에 의해 대학의 자율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VIII. 정보공개 및 평가에 의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올해부터 각 대학들은 학교규칙, 교육과정, 학생 선발, 학생 충원율, 재학생수,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전임교원 현황,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예·결산 내역, 학교의 발

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이상 공시하고, 그 공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은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정보공시제와 자체평가의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 제정과 시스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 IX. 맺으며

새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은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각 대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율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자율화를 기반으로 대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좋아하는 대학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대학들이 학부단계에서의 선발경쟁을 지양하고 교육을 잘 하는 경쟁을 해

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져 본다.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충실히 하고, 역경을 극복해 온 잠재능력이 있는 학생들,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뛰어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도 적극 선발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해 주리라 기대한다.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한 단계 두 단계 올려놓는데 헌신하는 대학들을 자주 보게 될 날이 바로 오게 될 것을 기다려 본다.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 대학 자율화를 통해 교육당국과 대학이 교육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 필 · 자 · 소 · 개

#### 황홍규

한양대학교 행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Visiting Scholar를 거쳐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초빙교수,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장,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으로 재직 중이다.